

코스피	2455.91	코스닥	678.19
	(-48.76)		(-16.20)
금리 (미국 9년)	2.607	환율 (원·달러)	1396.50
	(-0.031)		(+0.90)



‘롯데월드타워’ 담보 건 롯데케미칼

유동성 우려 급한불 꺾지만 ‘땀질 처방’ 우려

올 3분기까지 6600억 영업손실
3년 연속 적자로 부채비율 75%
2조규모 회사채 EOD 사유 발생
롯데타워 담보로 위기설 대응에
근본적 재무구조개선 필요 지적

유동성 위기설에 휩싸인 롯데케미칼이 최근 롯데월드타워를 은행권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며 신용보강에 나섰다. 이번 조치로 당장의 문제는 불식시키겠지만 근본적인 재무 구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하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올 들어 3분기까지 6600억원의 누적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누적 순손실은 6814억원에 이른다. 지난 2021년에는 1조 5356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으나 이듬해부터 실적이 급격히 악화됐다. 3년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채비율은 지난 2021년 48%에서 2022년 55%, 2023년 65%, 올해 3분기 75%로 크게 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1일 롯데케미칼이 발행시기가 미도래한 회사채에 대한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해 유동성 위기설이 불거졌다. 롯데케미칼은 회사채를 발행할 당시 3개년 평균 이자비용 대비 상각전영업이익(EBITDA) 5배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특약 조항을 걸었다. 하지만 지난 3분기 말 기준 롯데케미칼의 이자비용 대비 EBITDA는 4.3배에 불과했다.

이에 롯데그룹은 롯데케미칼의 회사



예산안 삭감 관련 기재부 긴급 소집회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1급 이상 간부들을 긴급 소집해 야당의 일방적인 내년도 예산 삭감안이 국민생활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뉴시스

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롯데월드타워를 은행권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했다. 롯데타워의 가치는 현재 6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롯데케미칼의 회사채 2조 450억원을 상회하는 규모다.

롯데그룹은 “롯데타워 담보는 시장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다. 위기설을 불식시키고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기적인 해결책에 그칠 뿐 재무 체질의 근본적인 개선이 없으면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 파

른다. 석유화학업계의 전반적인 불황에도 유독 롯데케미칼의 재무 부담이 커진 주 원인은 지난 2023년 3월 동북 제조업체 일진머티리얼즈를 2조 7000억원에 인수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롯데케미칼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등 무리한 행보를 보였다는 것. 당시 인수 과정에서 금융권 자금 1조 3000억원을 조달했다. 이중 7000억원이 내년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다. 또 전해액 유기용매 생산 설비에 약 3500억원, 미국 양극박 공장 건설에 약 4억 5000만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케미칼은 일진머티리얼즈 인수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전지소재사업 매출액 목표치를 5조원에서 7조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그러나 전기차 시장의 성장 정체로 인해 업황이 침체되면서 기대했던 이익을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의 지난 2023년 영업이익은 120억원으로 전년 대비 85.9% 감소하여 실적이 가파르게 추락했다. <2면에 계속>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불 붙은 비트코인 11월에만 38% ↑ 선물 10만弗 돌파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11월에만 38%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선물시장에서 10만달러를 돌파하면서 현물시장에서도 이달 중 돌파를 예상하고 있다.

1일 가상자산시황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달 1일 7만달러에 거래됐던 비트코인은 지난달 30일 9만7000달러를 기록하면서 11월에만 38.5% 상승했다.

미국 대선일인 지난달 5일(6만7600달러)기준으로 보면 무려 43% 급등했고, 지난달 최저점(5일 장중 6만5000달러)과 최고점(23일 9만9655달러)의 상승률은 무려 53.3%에 달한다.

비트코인 폭등은 트럼프 당선인이 후보시절 전 공약한 친(親)가상화폐에 대한 행보가 실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을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보유하겠다”고 밝힌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정부효율부’ 신설을 확정지었다.

트럼프 친가상화폐 행보 실현 SEC 규제완화 기대, 투자 열기 ↑ 선물시장 10만 달러 돌파 기록 “연말 최대 12.5만 달러 가능성”

‘정부효율부’는 연방 정부 전체의 재정 및 성과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고 과감한 개혁 권고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기 때문에 가상화폐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장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내정되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또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기간가상자산 산업에 대해 단속과 강한 규제를 추진해온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사임을 발표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 겐슬러를 해임하겠다고 밝힌 만큼 가상자산 산업 발전에 진심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투자자들 또한 트럼프 당선인의 행보에 화답하듯 비트코인 매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이달 10만달러 돌파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의 제프 켄드릭 애널리스트는 “비트코인이 연말까지 10만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며 “최대 12만5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

日 엔화 가치 급등... 물가상승에 금리인상 기대감

원·엔 환율 7일 연속 상승
주간기준 9월20일 이후 최고가

지난달 100엔당 800원대까지 하락했던 원·엔 환율이 상승하고 있다. 지난달 일본 내 물가 상승률이 일본은행(BOJ)의 물가 안정 목표치와 시장 예측치를 모두 상회하면서, 일본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에 엔화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1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 11월 29일 원·엔 환율은 전일보다 8.81원(0.96%) 오른 100엔당 929.52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

다. 이는 7일 연속 상승으로, 주간 거래 기준 지난 9월 20일 이후 최고가다. 이날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도 상승을 이어갔다.

같은 날 엔화 가치의 척도인 엔·달러 환율도 빠르게 하락(엔화 가치 상승)했다. 이날 뉴욕외환시장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49.61엔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전일보다 1.81엔(1.19%) 낮아진 수준으로, 엔·달러 환율이 140엔대에 진입한 것은 지난 10월 이후 한 달 만이다.

앞서 엔화는 지난 10월 중순 이후 100엔당 900원 전후에 머무르며 약세

를 지속했다. 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로 엔화 가치 상승의 원동력이 됐던 미·일 기준금리차 축소가 멀어졌다는 전망이다. 일본은행도 금리 인상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 엔화 약세를 부추겼다.

앞서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지난 11월 18일 “금융완화의 추가 조정을 어떤 시기에 진행할지는 앞으로의 경제·물가·금융 등 상황에 달려 있다”며 “대회 금융정책결정위원회에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 및 정보, 경제·물가 전망을 업데이트하면서 정책을 판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우에다 총재의 메시지를 비둘기파적(통화 완화 정책 선호)으로 받아들였고, 12월 금정위에서는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었다. 당분간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란 전망에 엔화는 지난 19일 100엔당 800원대까지 하락했다.

계속된 엔화 약세에 일각에서는 7월 이전의 ‘슈퍼 엔저’가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으면서 엔화는 지난달 말 빠르게 강세 전환했다.

<4면에 계속> /안승진 기자 asj1231@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한동훈, ‘코인과세 유예’ 野 동의 “국민 못 이긴다” /사진 뉴시스
▲ 국민의힘 “野, 재해대책 예비비도 들어내... 나라 끝장내기 예산삭감”

▲ 공공기관 46% 수도권에... 서울에 122개사 ‘집중’
▲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일정 또 연기... 내년 하반기 이후로



▲ 박찬대 “가상자산 과세, 2년유예 동의... 상속·증여세법은 부결” /사진 뉴시스
▲ 하윤수 부산교육감 “당선후호여부” 12일 대법원서 결정